

2018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한국경제학회 주최 특별세션 발표자료

한국경제의 제문제와 생태계 접근의 필요성

2018. 2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1. 연구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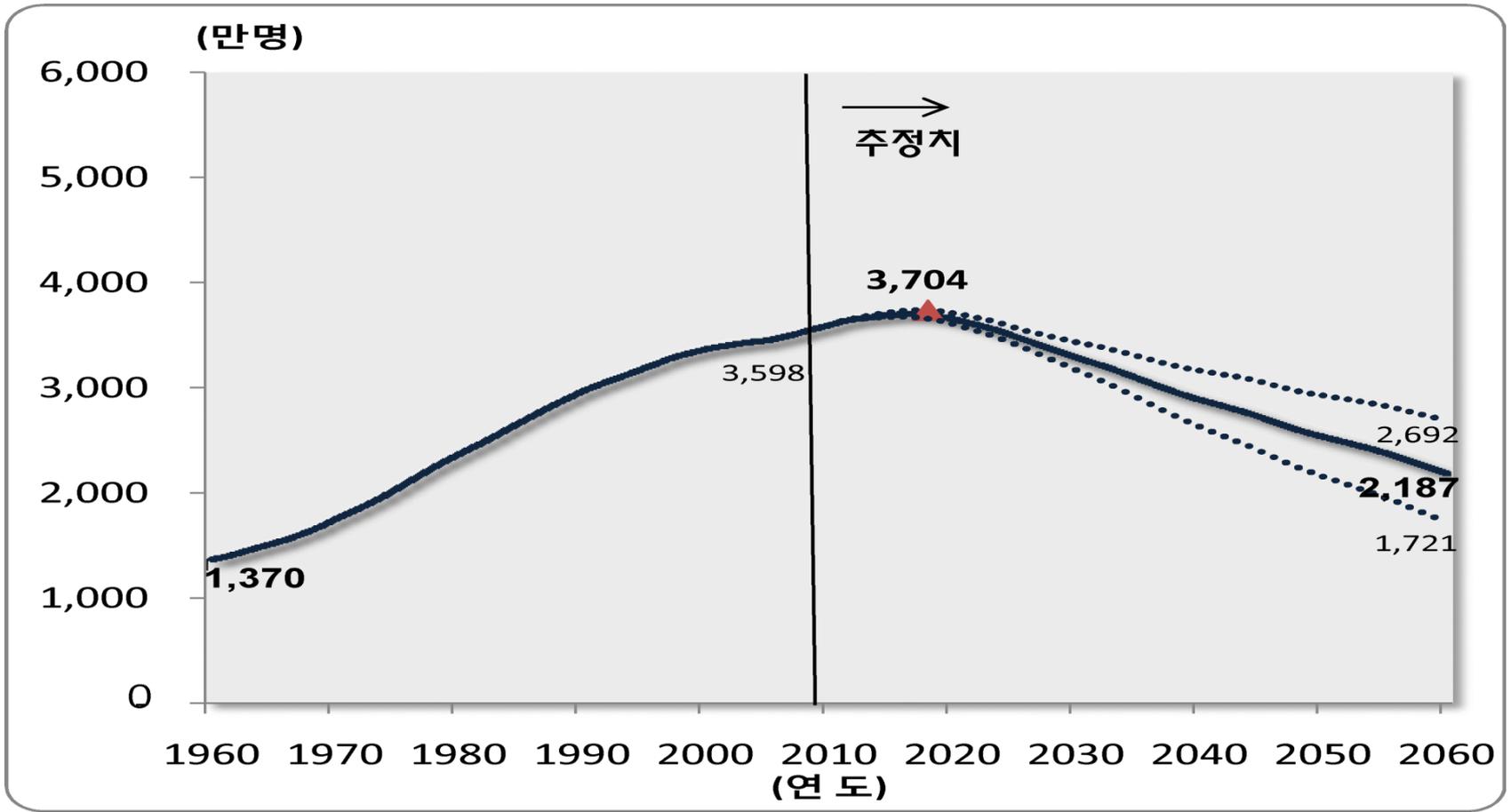
- 한국경제의 문제
 - 저성장 고착화
 - 소득과 부의 양극화 심화 : 청년실업 증가, 일자리 부족, 복지 및 연금체제 구축 미비, 부동산 가격상승
-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복지수요증가로 가계부채 및 국가부채 증가 우려
- 기존의 대책
 -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규제완화와 노동개혁
 -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수부양과 중소기업지원정책
 -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인상 및 세율인상으로 복지 확충
 - 공정거래 확립

저성장의 고착화

연도	경제성장률(%)
1960-1969	8.46
1970-1979	10.16
1980-1989	8.64
1990-1999	6.68
2000-2009	4.43
2010-2012	4.16
2012	2.30
2013	2.90
2014	3.30
2015	2.80
2016	2.80
2017	3.1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추이 (15세-64세)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

Years	Potential GDP Growth Rate(%)
1981-1990	8.6
1991-2000	6.4
2001-2010	4.5
2011-2020	3.6
2021-2030	2.7
2031-2040	1.9
2041-2050	1.5
2051-2060	1.0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추정

내수와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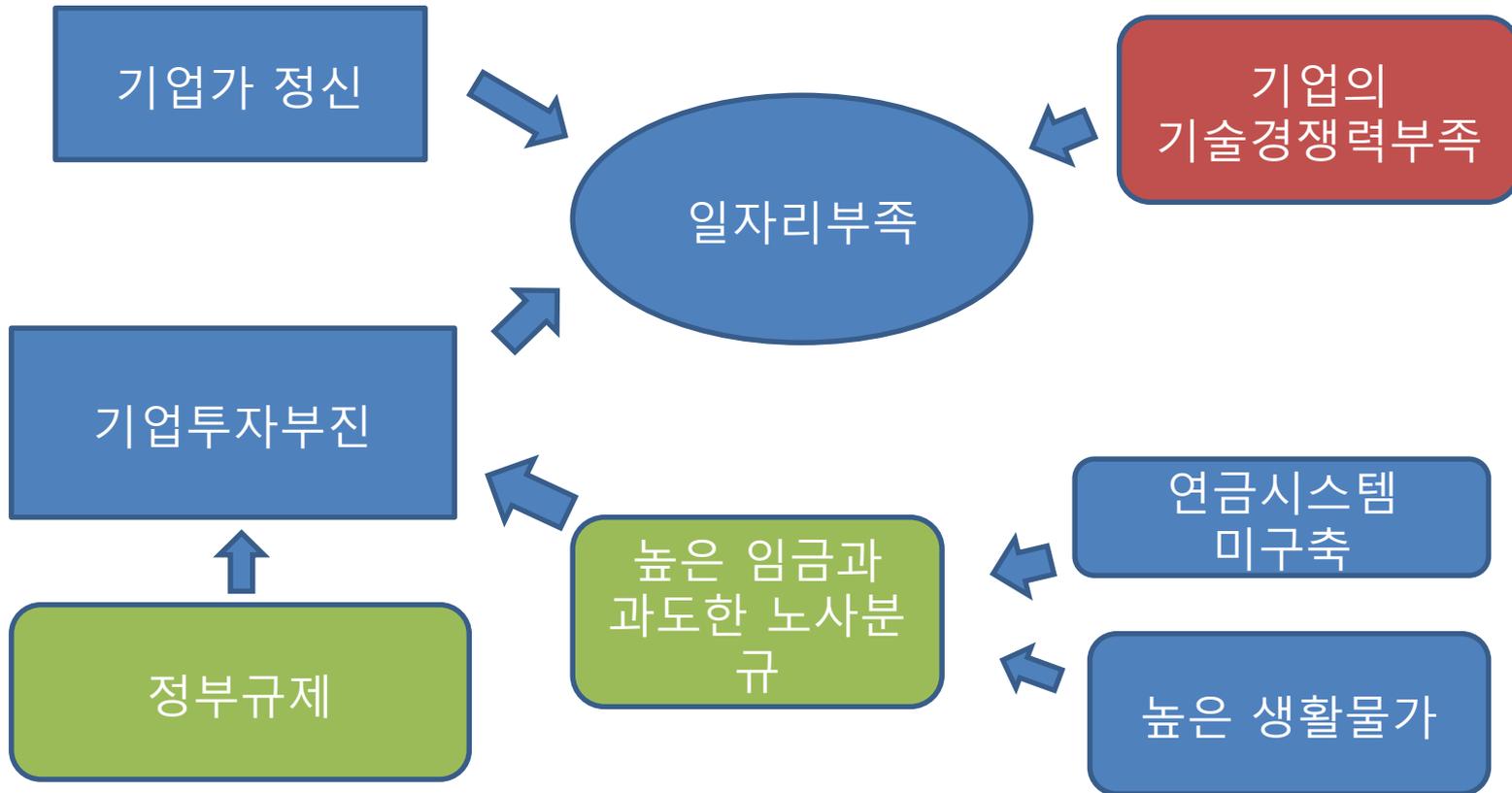
-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의 일자리 비중이 높음
- 고용비중 : 제조업 17%, 서비스업 78%(건설 7%, 연구개발 5%) 농림수산업 5%
- 중소기업의 고용비중 80%이상, 대기업고용비중 20%
- 실업률은 3.7%로 최고
 - 청년(15~29세)실업률은 사상 최고인 9.8%(취준생 포함 체감실업률은 20%이상)

제시되는 해결책 : 수출보다 내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 수출 : 대기업 중심
- 내수 : 중소기업 중심
- 기존의 낙수효과 : 대기업수출로 중소기업고용증가(소득파급효과가 있었음)
- 최근의 낙수효과 : 대기업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고용 늘어나지 않음
- 대기업의 사내유보이윤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 증가 : 중소기업은 대기업 임금의 60%

- 낙수효과가 작은 원인 : (1)대기업 노조의 독식 (2) 중소기업 생산성 낮음, 기술수준 낮음 (3) 중소기업에 불리한 불공정한 제도 (동반성장, 공정성장) (4) 국내임금 상승으로 해외생산 및 부품공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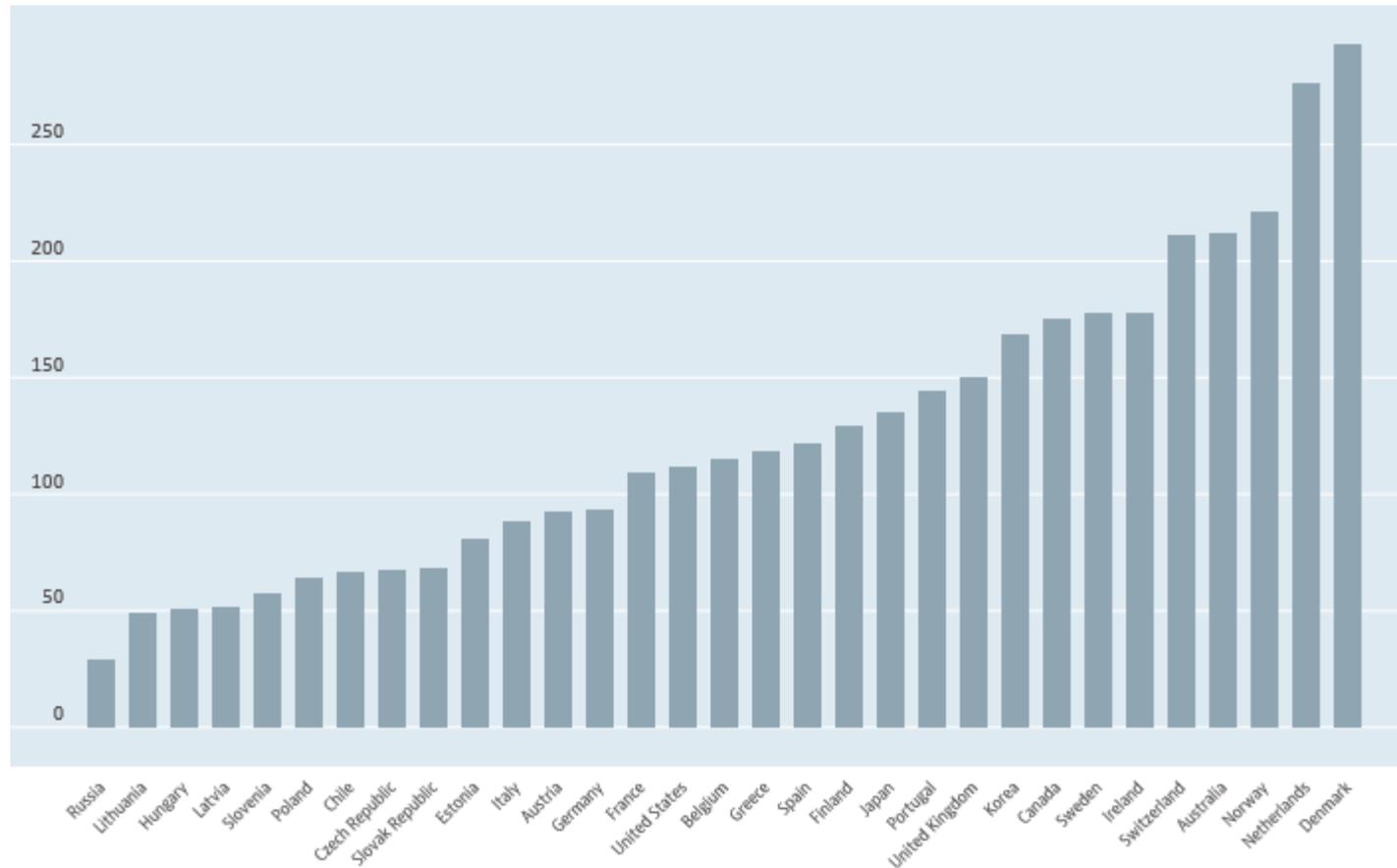
일자리 부족의 국내적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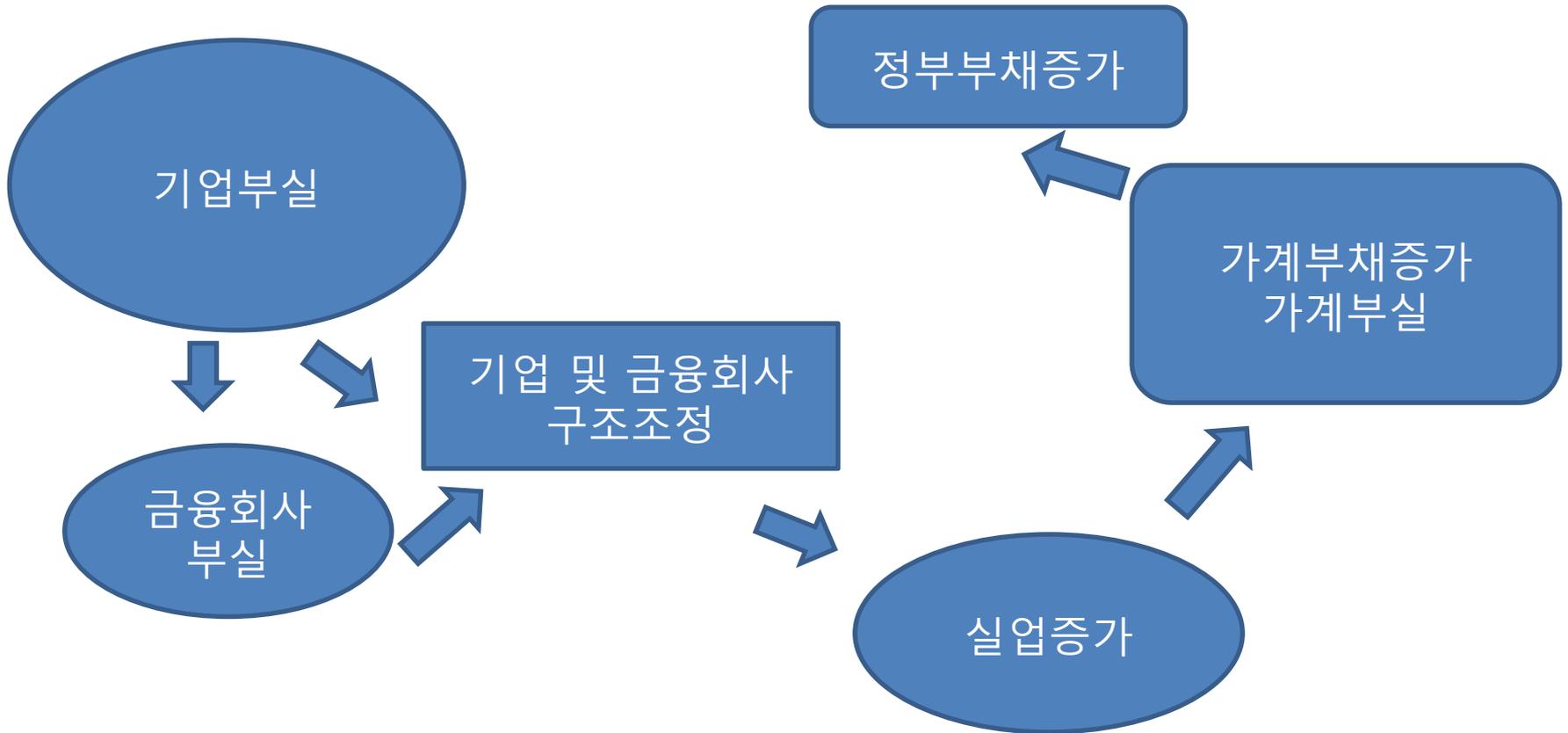
가계부채의 규모

- 2017년 9월 가계신용기준 1,419조원, 가계부채(자금순환통계, 자영업자 부채 일부포함) 기준은 1,566조원
-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할 때 가처분소득 대비 156% 그러나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자금순환통계)로 볼 때는 178%로 높아짐
- 2008년의 120%에서 급격히 증가추세
-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
- OECD 평균보다 134%에 비해 높음. 미국은 112%, 일본은 135%이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구는 세금이 높아 가처분소득이 낮아지면서 200%를 상회함

OECD 국가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2015)



기업부실에서 가계부실로



내수부양 및 서비스업의 부작용 : 부채위주의 성장

- 국부의 창출에 관심 가져야
- 중농주의, 노동생산성의 향상, 기술진보, 국내 부존자원 존재 여부 등이 폐쇄경제하에서의 국부창출의 방법
- 내생적 성장이론 (신성장이론)에서는 제도(institution)가 혁신과 기술진보를 결정함
- 개방경제하에서는 수출에 의해 외국으로부터 국부를 창출함 : 중상주의 (mercantilism) : 요소부존과 요소집약도, 보호무역, 환율정책
- 성장전략과 정책의 선택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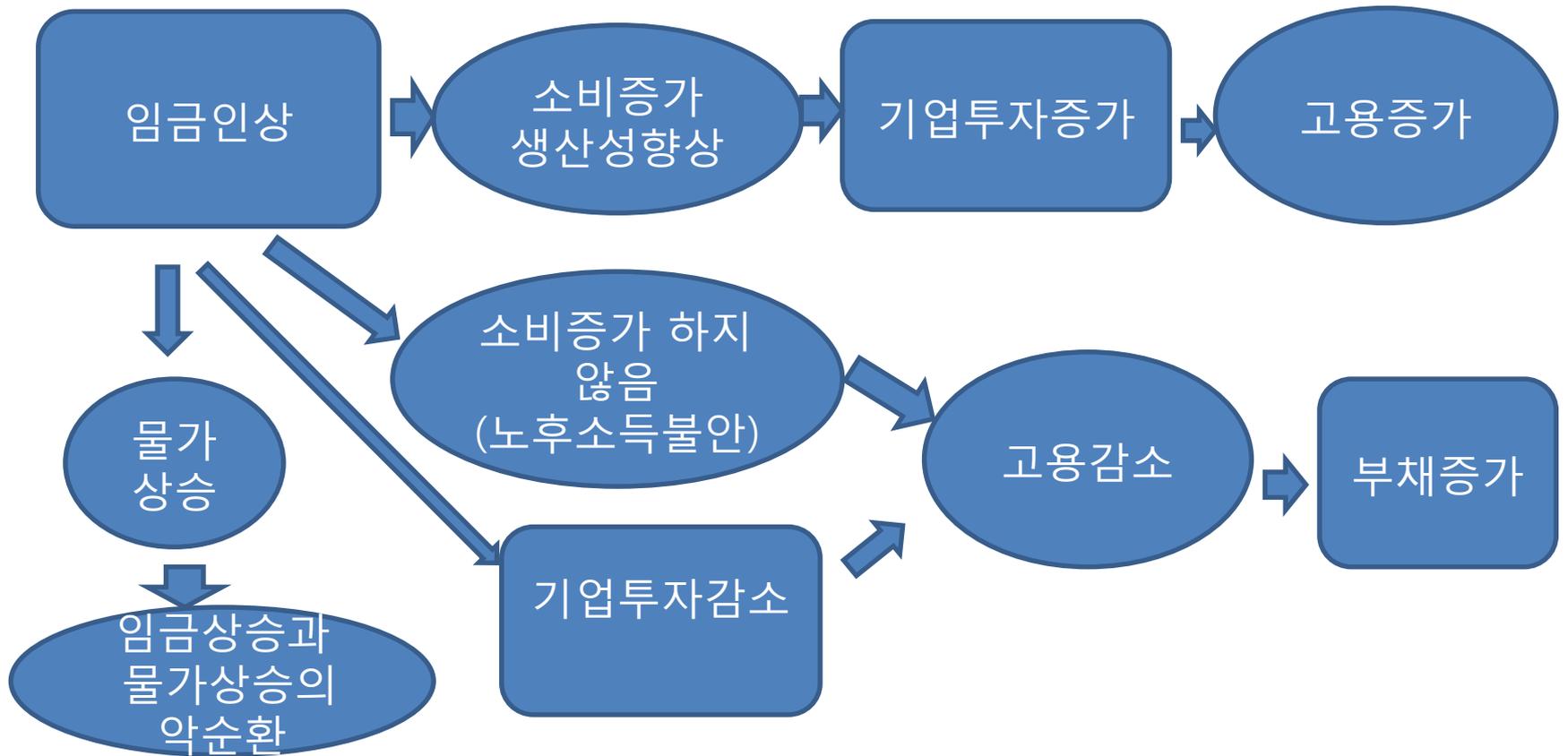
일자리 감소

- 소규모 개방경제 : 국부의 창출은 수출을 통해서 이루어짐
-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내수규모가 작아 내수부양의 경우 성장률을 높일 수 없으며 과도하게 성장률을 높일 경우 부채위주의 성장이 됨
 - 사례 : 김영삼정부의 신경제정책은 내수부양정책이며 기업부채를 늘리고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함, 지난정부 역시 내수부양을 시도했으며 가계부채가 증가함
- 서비스업은 수출이 어려우며 제조업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으며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

일자리 감소의 구조적 요인

- 선진국은 고성장기에 연금과 복지체제를 구축하여 저성장의 부작용이 작기 때문에 서비스업과 내수를 강조함
- 한국은 고성장기에 연금과 복지체제를 구축하지 않아 저성장 이 지속시 기업도산으로 일자리 감소는 물론 복지수요증가로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됨
 - 남미나 남유럽경제의 가능성이 있음
- 부채가 늘어날 경우 소비가 감소하면서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속으로 들어감
-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수 밖에 없음

소비와 고용감소의 악순환



성장담론의 중요성

- 소득주도성장전략 vs 투자 혹은 혁신주도성장전략
(분배를 통한 성장 vs 성장을 통한 분배 :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진행하지만 성장이 우선함)
- 제조업 성장전략 vs 서비스업 성장전략
- 대기업 성장전략 vs 중소기업성장전략 vs 동반성장전략
- 수출주도성장전략 vs 내수부양성장전략
- 제도개선을 통한 신성장전략

소득과 부의 양극화 심화

-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연금과 복지가 충분하지 **않**
은 고령층과 청년층의 소득감소로 소득양극화 심
화
- 고임금으로 사무직 조기퇴직 :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에 대부분 퇴직
- 고령화+저성장+연금 및 복지체제의 미구축 = 구
조적으로 복지수요증가로 국가부채증가함
- 소득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분석필요

기존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 해법

- 복지지출을 위한 세수마련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동산 세금을 인상시킴
-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 해소
- 다양한 이익집단의 반발로 쉽지 않음 : 대기업노조의 반발, 법인세 인상시 투자감소, 부동산세 인상시 부동산 버블 붕괴 및 가계부채 부실화, 건설경기 위축

소득과 부의 양극화 해소방안

- 소득 = 임금소득+자산소득
- 임금소득은 기존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자산소득은 인프라구축과 연관이 있음
- 저소득층 지역의 인프라 구축(교통, 교육, 상업및 생활 시설)을 늘릴 경우 자산소득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 문제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있으며 이익집단의 역할로 인프라 투자가 어려움

2. 새로운 접근방법 필요

-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원인분석이 중요함
- 기존의 접근방법에 의해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음 (정책실패를 반복하면서 저성장, 양극화가 고착화될 가능성 높음)
- 기존의 접근방법의 문제점
-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접근방법의 문제점은 수학적, 과학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면서 Ceteris Paribus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하다면)가정을 도입함
- 경제적 현상을 경제적 원인 특히 한정된 원인으로만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함
- 다른 분야가 경제적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에서 배제함 (수학화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임)

It's the politics, stupid

- 경제적 현상 = f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역사적 요인
- 경제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함
- 특정부문의 경제적 현상 = f (특정부문의 경제적 요인, 다른 연관부문의 경제적 요인)
- 다른 부문의 경제적 요인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분석하지 않음, 상호연관성을 배제함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

-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신고전학파의 접근방법과 달리 원인을 다른 부문에서 찾거나 외부적 환경에서 원인을 찾음 (소득불공평은 자본가 그룹이나 세계화에 있다고 봄)
- 신고전학파 접근방법은 자기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음. 그리고 다른 연관부문이나 외부적 환경은 고려에 넣지 않음 (소득불공평은 노동 생산성이 낮은 데에 있다고 주장함)
- 두 접근방법을 모두 채용할 필요가 있음

3. 경제생태계 접근방법

- 경제생태계를 분석함에 있어 자연생태계의 4가지 특성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
- 이들 4가지 특성이 모두 적용되는 분야가 있는가 하는가 하면 경제, 과학, 교육분야에 일부분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1) 먹이사슬(연관관계)분석이나 (2) 이익 집단의 개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경우 (3) 그리고 정부나 금융회사의 개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복원 혹은 진화되는 경우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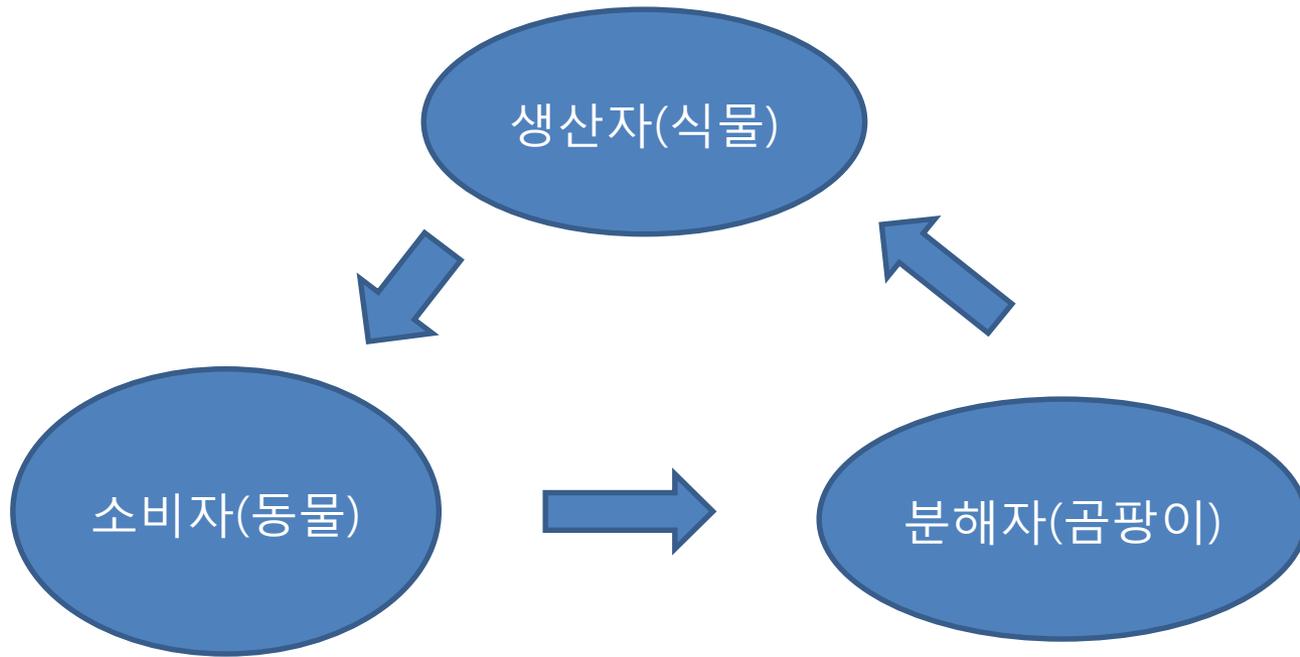
연관관계와 이익집단의 역할

-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 파악 필요
- 근본적인 원인을 해당 분야 외에서 혹은 환경적 요인에서 찾아야 함 (독감이 걸렸을 때 해열제로서는 증상만 치료되지 질병이 완치되지 않음)
- 생성, 용성, 소멸의 과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추격경제에서 중국으로 산업이전 시 새로운 신산업이 필요함)
- 이익집단과 정부등의 행태를 분석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1) 먹이사슬 : 연관성

- 자연생태계의 먹이사슬 순환체계 : 다른 부문과의 상호 연관관계
- 자연생태계 :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되어 순환됨
 - 생산자(식물) → 소비자(동물) → 분해자(곰팡이)
- 경제 및 사회현상 분석 : 연관관계 분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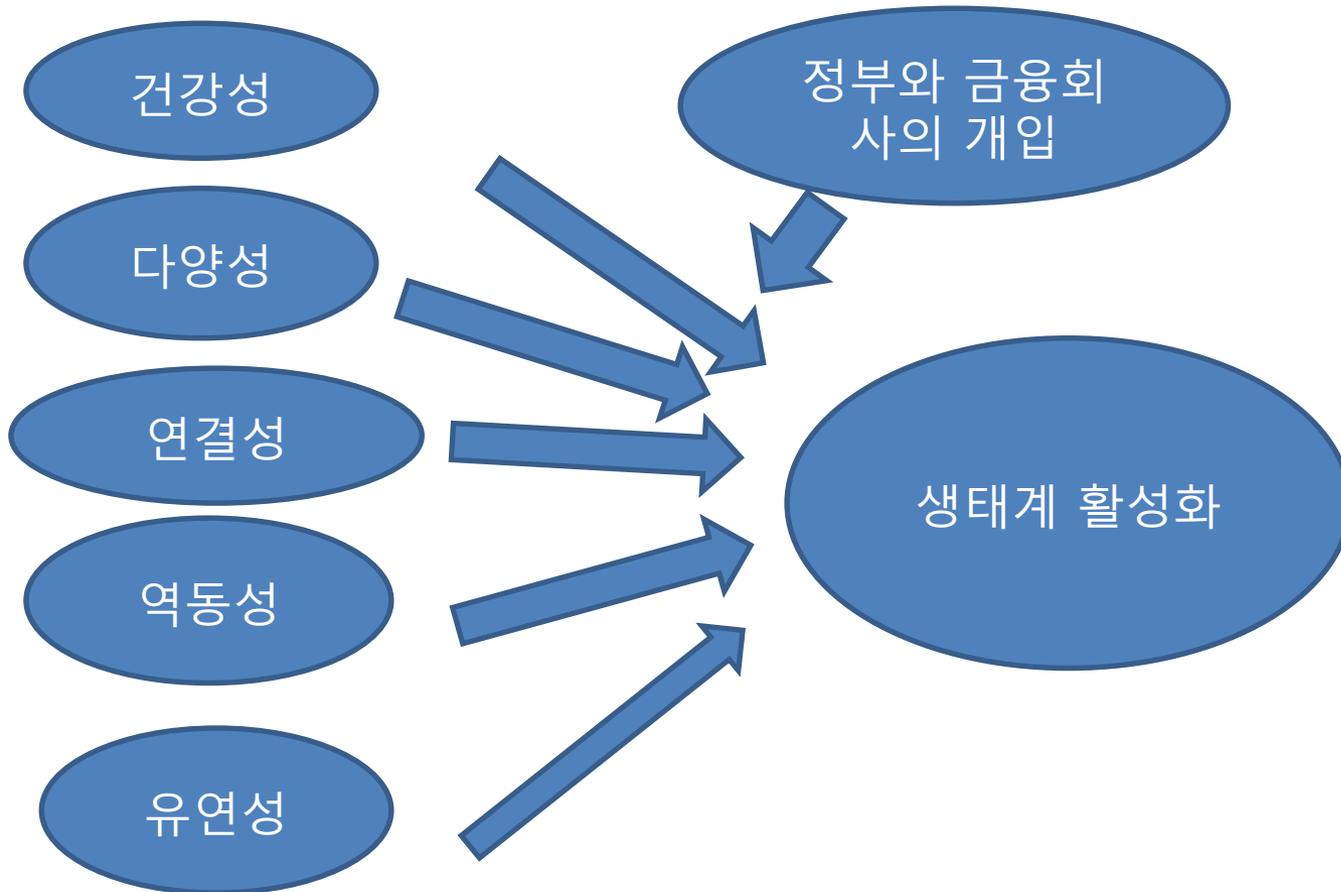
생태계의 순환체계



2) 생태계 활성화 요인

- 건강성 : 개체가 건강해야 순환과정이 원활해짐(가계가 건강하지 못하여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기업부실과 국가부실을 초래함)
- 다양성 : 다양한 종이 존재해야 생태계가 활성화됨
- 연결성 : 다른 부문간의 연결이 원활해야 생태계가 발전
- 역동성 : 각 부문간의 연결고리가 강하도록 역동성이 필요 (한 부문에서 정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유연성 : 불균형에 처했을 때 복귀할 수 있는 유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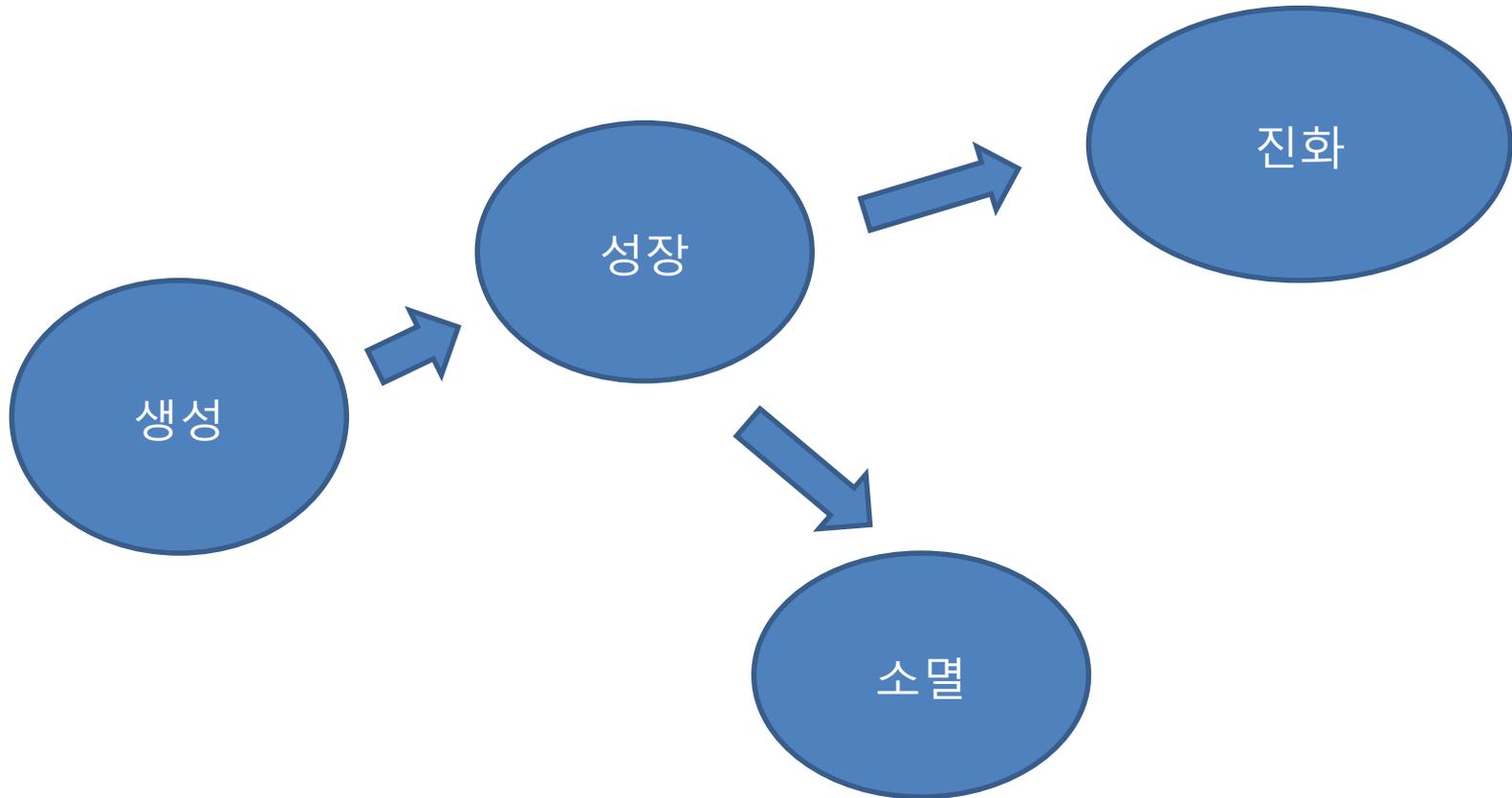
역동성과 유연성



3) 생성과 소멸의 순환체계

- 생성 ➡ 성장 ➡ 소멸 혹은 진화의 과정을 거침
- 경제 각 부문도 이러한 순환과정을 거침 : 기업이나 국가도 흥망성쇠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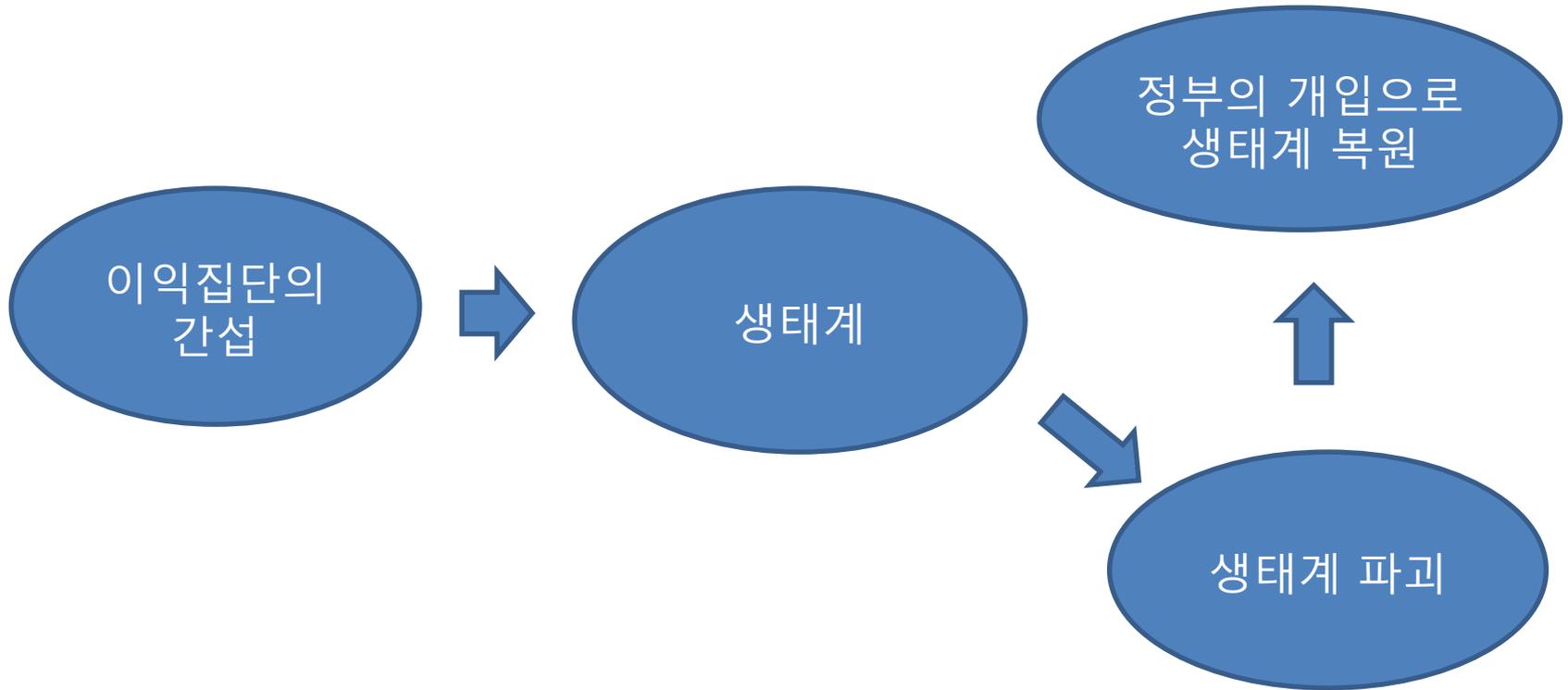
생태계의 생성과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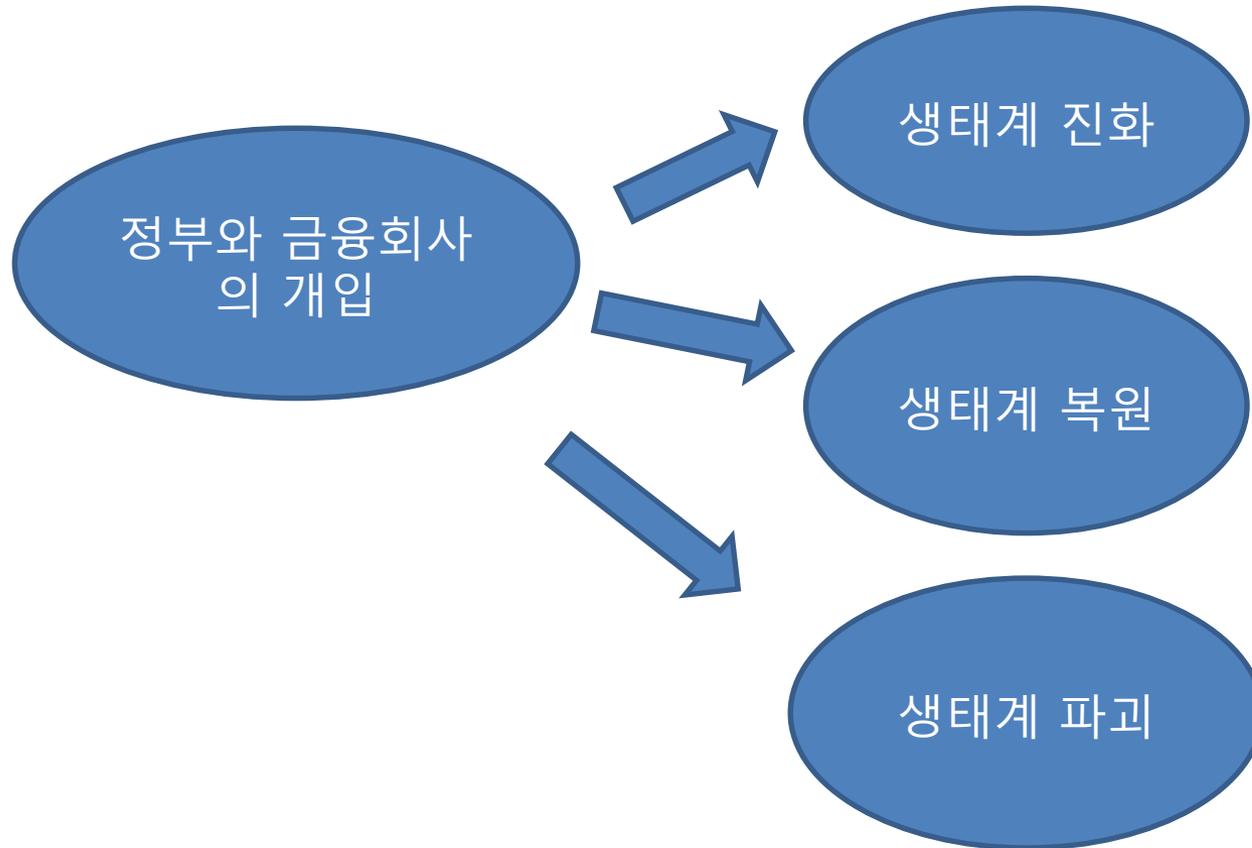
4) 개입과 생태계 복원

- 순환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인위적인 개입이 있는 경우 생태계는 파괴될 수 있음
- 생태계가 균형에서 이탈했는데 복원력이 부족할 경우 인위적인 개입(정부정책)은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으며 진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음
- 반면에 정부와 금융회사의 잘못된 개입은 경제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음

이익집단의 역할



정부 및 금융회사 개입의 영향



생태계 접근방법의 특성(요약)

- **응용** 생태계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경제분석에 응용할 필요가 있음
- **응용** 생태계는 다양한 특성이 있으나 이 중에서 3가지 특성을 응용
 - 생태계는 먹이사슬로 각 개체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
 - 생태계는 생성 → 용성 → 소멸의 단계를 거침
 - 생태계는 연결고리를 끊거나 혹은 생성소멸의 순환과정을 지연시키는 주체(정부, 이익집단, 경제정책)가 존재함
- 이러한 생태계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경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됨

4. 한국의 경제생태계 분석

- 저성장, 소득양극화의 문제를 기존의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생태계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
 - 높은 대외의존도, 국제통화가 아닌 비교환성 통화보유, 자본자유화, 경제적 평등을 중요시하면서 경제하려는 의지가 강한 특성
- 한국경제 각 부문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이들 부문만 독자적으로 분석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산업이나 기업의 경우 중국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부실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은 생성, 융성, 소멸의 단계를 강조하는 생태계 분석 방법이 유용함
-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익집단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 이익집단과 정책 등이 순환구조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이들 경제주체의 행태를 분석하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음

주요국의 대외의존도 (2015)

국 가	대외의존도(%)
한국	69.7
미국	20.7
일본	29.3
중국	34.6

주 : 대외의존도=(수출금액+수입금액)/ 경상 GDP

11개 부문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 한국경제의 저성장, 양극화와 연관이 있는 11개 부문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가계, 기업, 정부부문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 부문과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음
- 이를 통해 저성장, 소득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한국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성장전략을 제시함

5. 연구의 내용

- I. 서론 (정덕구, 니어재단)
- 1. 생태계연구의 필요성 (김정식)
- 2. 생태계 관점에서본 한국경제 진단(김정관, 기획재정부)
- II. 한국경제생태계의 부문별 분석
- 1. 가계부문
- (1) 가계부채(김정식)
- (2) 인구(이삼식,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복지(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4) 교육(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 2. 기업부문
- (5) 과학기술(이정원, 한국과학기술정책평가원)
- (6) 노동(금재호)
- (7) 산업(김도훈, 전 산업연구원)
- (8) 중소기업(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 (9) 기업 생태계(손동원)
- 3. 금융회사 및 정부
- (10) 행정 (정용덕)
- (11) 금융정책 (오정근)
- III. 한국경제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방안 (김동원)
- 참고문헌

부문별 내용 요약 1

- 1) 가계부실 (김정식)
- - (1) 고임금, 정부규제, 과학기술 미흡등이 기업부실을 유발하고 기업부실이 가계부실로 전가, (2) 내수위주의 성장전략이 부채위주의 성장을 유발 (3) 불합리한 각종제도(교육, 유통, 주택등)이 부동산가격 상승과 임금상승을 유발해서 가계부실을 증가시킴 (4) 저금리와 고령화도 원인임
- 2) 인구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1) 초혼연령증가가 원인이며 그 배경은 실업, 주거비용증가, 개인주의, 고학력등이 있음 (2) 자녀양육비 증가 (3) 여성의 사회진출 (4) 육아인프라 미비
- 3) 복지(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경기침체로 복지수요증가와 과도한 복지포퓰리즘, 선진국은 고성장기에 복지제도 구축함, 한국은 저성장기로 들어가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증가 예상됨
- - 복지수요증가 원인으로는 저성장으로 실업증가와 소득감소,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증가, 노동시장의 2중구조, 인구고령화, 복지기득계층의 반발

부문별 내용 요약 2

- 4) 교육(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 - 사교육비 확대와 공교육 부실화, 학습된 무기력 심화, 교육격차 확대로 계층간 이동사다리 붕괴
- - 원인은 사교육비 증가, 사회안전망 미비, 소득양극화등에 있으며 성적, 암기식, 경쟁위주의 교육, 국가주도 교육체제에 있음. 미래역량고양,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를 고려하는 혁신적 교육생태계로 전환필요

- 5) 과학기술(이정원, 한국과학기술정책평가원)
- - 저성장의 원인은 신성장동력에 대한 과학기술의 미흡에 있음. 선진국은 모두 신성장동력에 대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산학협력등에 노력하고 있음
- - 한국은 GDP대비 R&D투자는 세계1위 이나 신성장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산업은 추격국인 중국에 이전하고 있음
- - 과학기술이 미흡한 원인은 (1) 기존의 추격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과학기술전략 부재, 중장기 연구개발 부재 (2) 창의성이 부족한 교육제도 (3) 기술금융의 부족 (4)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부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격차 (5)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협력 (6) 연구인력간의 암묵적 답합구조

부문별 내용요약 3

- 6) 노동(금재호)
 - - 노동시장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필요
- 7) 산업(김도훈, 전 산업연구원)
 - - 신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생태계
 - - 원인은 추격형 산업생태계에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력산업이 신산업진입을 방해함.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음. 기존의 대기업 이익집단의 역할로 정부지원 및 금융지원 등의 제도에서 불리함.
- 8) 중소기업(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 - 혁신기업에 집중지원 필요, 담보중심에서 정보중심의 금융지원 필요
- 9) 기업 생태계(손동원)
 - -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구축필요, 한계기업 퇴출 필요

부문별 내용요약 4

- 10) 행정 (정용덕)
- - 목적위주의 국가주의에서 시민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
- - 개인의 복지수요와 국가의 재정사이에서 갈등
- - 국가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주의와 시민국가의 타협점을 찾아야 함

- 11) 금융정책 (오정근)
- - 정책금융의 실패로 공기업과 주력기간산업의 부실화 초래
- - 서민금융의 실패로 양극화심화
- - 원인은 정책금융기관의 비대, 은행의 주인 없음(은산분리), 정경유착, 전문성 결여 및 낙하산 인사, 잘못된 금융감독제도 등에 있음

5.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제언

- 연관관계 분석을 통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사용해야 현재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음
 - 가계부채 : 주택가격안정,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체제 구축, 사교육비 감소, 일자리 창출
- 올바른 성장전략 수립 필요 : 5년 단임 정치체제로 인해 정책의 단기화
- 한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해야 (미국과는 다른 특성)
 - 높은 대외의존도, 비교환성 통화, 경제적 평등을 중요시하는 국민성, 경제하려는 높은 의지
- 생태계의 순환과 복원을 방해하는 이익집단의 역할을 인식해야
 -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 상충시 개인의 이익선택하는 이익집단

감사합니다.

kimjs@yonsei.ac.kr